

# 도로변 으슥한 곳, 집중팔구 쓰레기 있다

### 제주시, 최근 4년 불법투기 하루 2건 꼴 2813건 적발 길바닥엔 담배꽂초 천지·도로옆은 생활쓰레기 '눈살'

지구 환경오염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로 시작된 세계기념일인 '지구의 날'이 어제(22일)자로 54주년을 맞았다. 하지만, 아직도 제주지역 곳곳에서 쓰레기 불법 투기 문제가 반복되면서 환경보호를 위한 성숙한 시민의식이 요구되고 있다.

지구의 날인 22일 오전 제주시 이도2동 제주문화관 인근 이면도로, 100여m의 도로 양 방향으로 비닐봉지, 플라스틱 등 각종 생활쓰레기가 즐비해 있었다.

도로를 따라 쪽 길어보니 나무와 풀이 우거진 쪽에서는 상황이 더욱 심각했다. 코를 찌르는 악취와 함께 캔, 페트병 등이 방치돼 있었으며, 김치통 등 비교적 큰 크기의 플라스틱 쓰레기가 있었다. 심지어는 비닐봉지에 담긴 쓰레기를 그대로 투척한 것도 발견됐으며, 건축폐기물로 추정되는 커다란 폐기물도 함께 널브러져 있었다.

맞은편 도로 구석진 곳에는 여러

명에서 함께 먹고 그대로 버린 듯한 맥주캔 수십개가 바람에 이리저리 뒹굴었다.

인근에는 '생활폐기물 무단투기 경고문'이라는 제목의 현수막도 걸려 있었지만, 경고문이 무색할 정도로 곳곳에서 쓰레기 더미들이 발견됐다.

같은 날 제주시 이도2동 제주중앙여고와 남광초등학교 인근 집수구는 무단으로 버려진 담배꽂초, 병뚜껑들로 가득 차 있었다.

오랜 시간 방치돼 있었던 담배꽂초 대부분은 색이 바래 있었으며, 쓰레기가 빼곡히 쌓여있는 탓에 한눈에 봐도 물이 흘러 내려가기에는 역부족인 상태였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우려와 함께 불만을 표했다. 인근 주민 A씨는 "근처에 초등학교도 있는데 그냥 쓰레기도 아니고 담배꽂초가 이렇게 쌓여 있으니 학부모 입장에서는 미관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안전도 걱정되는 상황"이라며 "여름이면



담배꽂초로 가득한 집수구(왼쪽)와 이면도로변에 버려진 건축폐기물, 생활쓰레기. 김채현기자

장마가 시작될 텐데 집수구가 제 역할을 못해 침수 피해가 오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제주 곳곳을 다니다 보면 쓰레기가 없는 곳을 찾아볼 수 없다"며 "행정이나 민간에서 아무리 환경보호를 외쳐봤자 스스로가 지키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 모두가 시민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제주시에 따르면 최근 4년(2020~2023년)간 제주시 읍면동 전 지역에서는 총 2813건의 불법 폐기물 투기가 적발됐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842건, 2021년 624건, 2022년 651건, 2023년 696건 등 매년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와 함께 부과된 과태료도 2020년 1억1831만

원, 2021년 8425만원, 2022년 8755만원, 2023년 1억623만원 등 총 3억 7000여 만원에 달한다.

제주시 이도2동 관계자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을 위주로 환경미화 작업을 하고 있으며, 이면도로, 오솔길 등에서는 제보가 들어오실 현장 점검에 나서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며 "쓰레기 불법투기를 발견한 시민들은 바로 해당 주민센터로 신고를 해주시면 즉시 확인해 치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22일) 바로 해당 장소들에 환경미화원 3명을 투입해 쓰레기를 수거했다"며 "대형폐기물은 양이 많아 한쪽이 모아둔 상태이다. 빠른 시일 내로 치우겠다"고 말했다.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 택배·퀵서비스 등 이동노동자 안전망 구축 도·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료 경감 업무협약

제주지역 택배기사와 퀵서비스, 대리운전기사 등 이동노동자의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산재보험료 지원이 처음으로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2일 제주도청 백록홀에서 근로복지공단과 '제주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도내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들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노동자의 산재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해 추진됐다.

협약을 통해 제주도는 산재보험 가입자 확대 및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근로복지공단은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정보를 제공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근로복지공단이 제공하는 정보와 이동노동자의 지원신청서를 바탕으로 도내 배달 종사자 및 이동노동자 850여명에게 2024년 1월부터 8월까지 최대 8개월분의 노동제공자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도내 이동노동자들은 사업주와 5대 5의 비율로 나눠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으며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노동자가 납부하는 50%의 산재보험료의 9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플랫폼 배달 및 이동노동자 산재보험료 지원사업 1차 공고 및 접수는 6월 중 이뤄질 예정이며 자격확인 등의 절차를 거쳐 1월부터 4월까지의 노동제공자 부담금의 90%를 8월 중 지급할 예정이다. 5월부터 8월까지 분에 대한 2차 공고 및 접수는 10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도내 주소를 둔 >택배기사 >퀵서비스 >대리운전 >방문강사 >대여제품 방문점검원 >가전제품 설치원 >화물차주 >방문판매원 등 총 8개 직종으로 업주가 특정장소에 국한되지 않고 이동하는 노동자가 대상이며 근무제공자의 월 보수액이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경우에 한해 지원된다.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 4·3희생자 '사후 양자'도 보상금 지급

### 행정안전부,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제주4·3 희생자의 '사후 양자'도 국가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4·3희생자 사후 양자에 대해서도 상속권을 인정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19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는 호주가 직계비속 남아 없이 4·3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돼 1991년 1월 1일 이전에 배우자(사실혼 포함)나 직계존속, 친족희생 양자로 선정한 사람도 상속권자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사후 양자 중 장남·장손만 상속권을 인정받는다.

지금까지 4·3희생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후 족보에 기재된 사후 양자는 고인을 위한 제사를 지내도 상속권이 없어 희생자 보상금을 받지 못했다.

이번에 개정안은 국가 보상금 신청 마감 기간을 2025년 5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1년 7개월 연장했으며, 희생자나 유족 신고 때 적용하던 보증인 제도를 가족관계 작성 시에도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야, 나 따라와 봐"... 신나게 뛰는 제주마들 22일 제주시 용강동 마방목지에서 제주마들이 신나게 뛰어 다닌다.

이상국기자

# 넙치 400마리 폐사시킨 양식장 직원 입건

권고사직을 당하자 양심을 품고 다니던 양식장 수조의 물을 빼 넙치 수백마리를 폐사시킨 5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재물손괴 및 건조물침입 혐의로 50대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9일 오후 9시쯤 제

주 서귀포시 대정읍의 한 넙치 양식장에 침입해 수조에 담긴 물을 빼내며 넙치 400여 마리를 폐사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도중 양식장 직원에게 발각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넘겨졌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양식장에서 일하던 A씨는 업무로부터 권고사직을 통보받자 이에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채현기자

한라일보 창간 35주년을 축하합니다

농업인의 행복을 향해  
지역 농축협과의 협동을 향해  
대한민국 국민의 희망을 향해  
보다 더 큰 세계를 향해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의 아름다운 향기가 시작됩니다

희망농업, 행복농촌  
농협이 만들어 갑니다